

202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외교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025. 3.

대한민국정부

목 차

I. 외교부 본부	1
II. 외교부 재외공관	28
1. 주미국대사관	30
2. 주유엔대표부	33
3. 주뉴욕총영사관	38
4. 주멕시코대사관	38
5. 주과테말라대사관	44
6. 주엘살바도르대사관	46
7.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47
8.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48
9.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52
10. 주오이시디대표부	53
11. 주프랑스대사관	53
12.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겸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56
13. 주유네스코대표부	58
14. 주스페인대사관	58
15. 주포르투갈대사관	59
16.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60
17. 주알제리대사관	60
18. 주튀니지대사관	62

19. 주이집트대사관	63
20. 주사우디대사관	64
21. 주인도대사관	66
22.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68
23. 주중국대사관	71
24. 주일본대사관	77

Ⅲ. 산하 기관 83

1. 한국국제협력단	85
2. 한국국제교류재단	86
3. 한·아프리카 재단	87

I . 외교부 본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변인실	1. 아프리카 지역의 재외공관 홈페이지의 업데이트 내용 간 편차가 있는바, 아프리카와의 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아프리카 지역 재외공관 홈페이지 관리 노력 필요	○ 아프리카지역 공관 대상 △ 수시 업데이트 및 점검 지시 △ 본부 자체 업데이트 상황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동 지역 내 공관 별 업데이트 내용 편차를 상당 수준 개선 ○ 향후에도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 전 재외공관 홈페이지 내용이 적시에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겠음
기획조정실	1. 유네스코 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전 세계에 12개의 새로운 외교 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열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하여 3월과 10월에 열린 공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것	○ 2023년 두 차례 심의위원회(3.16./10.4.)를 포함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 과정을 거쳐 공관 개설 대상국가 12개를 심의·의결 하였음. ○ 해당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제출·공개는 해당 국가들과의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제출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2. 2023년 12개 공관 설치와 관련, 공관심의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제출할 것	
	3. 주호놀룰루총영사관에서 최근 발생한 성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매뉴얼 운영, 사건 처리 및 조치 내용, 그리고 작년과 올해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내용, 일자, 참가자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	○ 공 관에서는 사건발생 직후 경찰신고 및 본부보고 조치하였으며, 「외교부(재외공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 피해자 고충상담 등 피해자보호 및 2차피해 방지 조치를 적극 시행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아울러 *2024년 공관장 포함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1/2/3분기) 및 국내 전문강사 초빙 대면교육(4분기)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 현재 공관장 포함 전 직원이 온라인 성폭력예방교육을 진행중에 있음 (추후 대면교육 추진 예정) * 2024년 3월(다같이 건강한 외교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6월(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9월(평등UP, 존중UP, 폭력예방), 12월(안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 2025년 3월(평등UP, 존중UP, 폭력예방)
	4. 외교부장관 궁정동 공관 이전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인하려는 조치로써 외교부장관 공관 공관 이전과 관련한 공문서 제출할 것	○ 외교부장관 궁정동 공관은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 규정에 의거하여 이전하였으며, 국감 당시 해당 공문서를 열람하고 목록 제출을 완료하였음.
	5. 국유재산 관련 공문, 세입 세출에 관한 공문, 국내 부처 간 행정 업무에 관한 공문 등의 자료가 누락된 경위를 설명하고 이를 제출할 것	○ 관련 문서 목록은 이미 제출하였으며, 필요시 향후 국회측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설명토록 노력하겠음.
	6. 부산엑스포 판세 메시지 전문 유출에 관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	○ 관계기관과의 협조하에 관련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였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할 당시 공관장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자료 일체 제출할 것	○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심사 자료는 인사 관련 사항으로서 대외공개가 어려우나 유관 의원실 등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였음.
	8. 군 출신 특임공관장이 많은데, 외교적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특임공관장 검증절차를 마련할 것	○ 역량과 자질을 갖춘 공관장이 보임될 수 있도록 유관 부서 협조 하에 엄정한 심사 진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9.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의 인사 추천 서류 및 특임공관장심사위원의 명단 등 자료 제출할 것	○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7조에 따라 위원장(외교부 1차관)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바, 구체 명단 공개 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심의를 보장하기 어려워 대외공개가 어려움을 적의 설명하였음.
	10. 98%의 재외공관에 도청 방지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로 전자파 차폐 방식으로, 신속히 전 공관에 첨단장비인 레이저 도청 방지 장비를 확대 설치할 것	○ 도청 대상 공간이 수목, 건물 등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 레이저를 통한 도청 위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공관에 레이저 도청방지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도청 위협도가 높은 공관 위주로 구축하고 있음 - 매년 재외공관 수요 조사 및 관계 기관과 정보보안 실태점검 출장 계기에 레이저 도청에 취약한 공관이 있는지 점검하여 설치 진행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의전장실	1. 과잉 의전과 관련하여 주네덜란드대사관의 전문을 공개할 것	○ 관련 전문들은 정상 행사 관련 상대국과의 세부 협의 내용을 담고 있어 공개시 상대국과의 외교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향후 여타 국가들과의 정상 외교 관련 협의를 추진하는 데 있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공개가 어려움. - 정상행사 의전 관련 상세사항에 대한 이견이나 상이점이 있기 마련이며, 반복 협의를 통해 이를 조율하여 네덜란드 국민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바, 네측도 우리 의전팀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에 대한 만족감과 사의를 우리측에 수차례 전달해 왔음.
	2. 2024년 2월 예정된 독일과의 정상회의가 우리 측의 일방적 취소로 인하여 취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이 예비비에서 지출 되었는바, 해당 위약금 사용 내역을 제출할 것	○ 정상외교 관련 세부 소요내역은 외교적 측면, 보안상 고려 등으로 공개하기 어려우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공개한 바 없음을 양해 바람. - 순방 연기 결정에 따라 비용이 일부 발생 하였으나, 가능한 범위에서 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한 절감 노력을 기울였음.
	3. 2022년 11월 영부인의 앙코르와트 방문 일정이 돌연 취소된 것과 관련하여 명확한 사유를 밝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동 일정은 필수 일정이 아니라, 각국이 자율적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대 일정으로, 부대 일정 참석 대신 자체적인 일정을 수립한 것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명예영사중 유죄판결을 받거나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리하여 주한 명예영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명예영사 자격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자격이 취소되도록 ‘주한 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를 보완할 것	○ 외교부는 외국정부의 명예영사 임명 요청시 경력, 평판 등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명예영사의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임. ○ 이와 관련, 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개정 필요성을 검토중임.
아시아 태평양국	1.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판결금을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조달하는 방안 (제3자 대위변제안)과 관련된 로펌 자문 결과를 제출할 것	○ 민감한 외교사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률 자문 결과는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2. 한미일이 군사협력을 제도화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는 바, 일본의 수송기 등 자위대가 우리 영토에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	○ 외국 군대의 우리 영역 내 진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일본의 새 총리 이시바 시게루의 과거사 및 안보 문제에 대한 태도를 고려하여 한일 관계가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그간 한일 양국 정부는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통해 관계 개선의 긍정적 흐름을 조성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 이러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은 25.1월과 3월 외교장관회담을 개최, 아래 사항에 합의함. -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한일 관계를 흔들림없이 발전시켜 나가는데 의견 일치 -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확대 -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있어 긴밀한 파트너로서 적극 협력
	4.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며 新한일관계, 성숙한 모습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것	○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간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 중임. - 양국 정부 공동 주도 사업으로서 ▲로고 및 슬로건 공모('24.12월 말), ▲N서울타워/도쿄타워 점등('25.2월) 및 ▲기념 리셉션, ▲학술회의 등 개최 예정 - 60주년 계기 기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양국 외교부 내 TF를 설치하여 긴밀히 협의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한일 경제·문화·학술 등 교류 지원 차원에서 정부 및 민간 주도 사업을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승인하고 있음. ※ 60주년 기념사업 목록: 외교부 홈페이지 '영사국/지역 - '동북아시아 -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탭 참고
	5. 일본 시민단체가 매년 추도식을 하고 있는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경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정부가 중심이 되어 공식화한 행사 추진을 검토할 것	○ 매년 오사카 총영사관에서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으며, 일본측도 후생노동 대신 명의 추도사를 송부하고 정관계 인사의 참석하에 추모의 뜻을 표하고 있음. ○ 피해자의 고통 치유 및 피해구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지속하고, 피해자 구제와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측의 협조를 건인해나갈 것임.
	6. 우천사(유텐지)에 아직 송환되지 않은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골 275위의 송환을 위해 일본과 협의할 것	○ 주무부처(행안부)와 긴밀한 소통 및 협력하에 유골 봉환 관련 일본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지속 노력하고 있음.
	7. 일본은 독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행동하고 있는바, 우리도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해외 소녀상 등의 설치는 전시 성폭력이라는 보편적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추모·교육 차원에서 해당 지역과 시민사회의 자발적 움직임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대응해나가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한일 간 출입국절차 간소화 논의가 진행 중인데, 독도가 분쟁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동 관련한 논의를 중단할 것	○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이며,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히 행사하고 있음. ○ 한일 양국 국민 출입국 간소화 조치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
	9.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배소 판결 강제 집행 관련, 일본의 수령 거부에 따른 재산 명시 신청 각하 문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	○ 동 판결 집행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임.
	10. 일본의 역사 왜곡 발언과 독도 망언의 지속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우리 정부는 독도·역사왜곡 등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시마다 단호하게 대응 중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안별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노력도 경주 중임. ○ 앞으로도 우리 입장에 근거하여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대응해 나갈 예정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전범 14명의 유해에 대한 분사 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통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할 것	○ 우리 정부는 야스쿠니 신사가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성한 상징적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오는 등 지속 노력하고 있음.
	12. 여행박람회 트래블쇼 2024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를 배부한 것에 대한 공식 기록 차원의 우리 정부의 항의를 제출할 것	○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포함된 일본정부관광국 제작 지도 관련, 외교부는 10.21(월) 사실 파악 즉시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음. - 각종 민간 행사의 경우, SNS 및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하고 파악 즉시 항의 및 시정 요구 중 ○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최근 한일관계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양국 국민들이 한일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은바, 한일 간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그간 한일 양국 정부는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통해 관계 개선의 긍정적 흐름을 조성해 왔음. - 양국 간 인적 교류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한 결과, 24년도 인적교류 현황은 역대 최고치 돌파(약 1,207만명) ○ 한일관계 개선 및 인적교류 증가에 따라 양 국민 간 상호인식도 과거에 비해 개선 추세로 확인되는바, 앞으로도 관련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 ※ 일본 내각부 2024년 일본인 대상 인식조사(25.2.14. 발표) - 한일 관계가 양호하다: (日) 51.2%(작년 대비 5.1%p 증가) ※ 머니투데이-한국갤럽 2025년 한국인 대상 인식조사(25.2.27 발표) - 현재 한일 관계가 좋다: (좋음) 49% (14.3월 3%) / (나쁨) 41%(14.3월 94%)
	14.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의 재원부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해법 발표 이후에도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뵙고 해법 취지를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음. ○ 판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재단은 그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알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동북 중앙아시아국	1. 최근 한중관계의 진전에 따라 중국 측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한중 양국은 금년과 내년에 각각 APEC 의장국을 맡게 되는 만큼 이를 매개로 협력을 이어나가자는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음. ○ 최근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계기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3.21.)에서 한중 양측은 경주 APEC 계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이루어져 양국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함.
북미국	1. 국제정세의 급변, 일본이 핵 반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는 바, 우리도 자체 핵무장 추진을 검토할 것	○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NPT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 중이며,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확장억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없음.
	2. 새로이 들어설 미국 행정부 및 일본 내각과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 협의를 위해 노력할 것	○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한미일 3국 모두 확고한 공통 인식을 갖고 있음. - 2025.2월 뮌헨안보회의 계기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서도 3국 간 안보협력 의지를 재확인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2025.2.15.) -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장관들은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3국간 강력한 안보 협력을 포함하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힘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임.
유럽국	1. 러시아에 억류된 민간인 상황과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철수 사례를 포함하여, 러시아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 우리 정부는 러시아 내 우리 국민·기업 권익 보호를 위해 러측 및 유관부처와 소통을 지속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러시아 국내 정세, 전쟁 동향, 주요국 대러조치 등 기업들이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하여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2. 우리 기업의 러시아 철수 등의 문제에 대해 외교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우리 국민·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지속하겠음.
	3.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에 대응하는 외교 언어 사용에 있어 외교부가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	○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일관된 입장에 따라 국제사회의 논의에 동참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아프리카 중동국	1.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전담조직을 마련할 것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속조치는 외교부 아프리카1·2과에서 이행중 ○ 4개 팀(교역·투자/에너지, 핵심광물, 개발·금융, 인프라)으로 구성된 범정부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TF 발족(24.10월)
	2. 이스라엘-이란 갈등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대비할 것	○ 유엔 안보리 참석,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중동 정세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 우리 입장 표명 중 - 본부 및 유관 공관(UN대표부, 이스라엘, 이란 등) 간 긴밀한 협의 채널을 구성하여 현지 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대응 중
영사안전국	1. 故 지익주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현직 필리핀 경찰이 관련된 사건인만큼 유가족에게 필리핀 정부의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제도적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 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음.
	2.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적극 적시 초동대응과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	○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 접수 시 공관은 경찰 신고 절차 안내, 신고서 대리 작성 등 영사조력을 적극 제공 중임. ○ 주캄보디아(대)에 경찰주재관 1명을 증원('24. 10. 28.), 캄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치를 지속 요청하는 등 취업사기·감금 피해 예방·대응을 위해 적극 노력 중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상 독도에 재외공관 표기가 되어 있던 것을 시정할 것	○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상세지도에서 독도 홈페이지 연결 아이콘과 재외공관 홈페이지 연결 아이콘(태극마크)이 동일하게 표시된 것을 발견('24.1.31.)하고, 즉시 시정조치(태극마크 삭제) 하였음. ○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지도 고도화사업을 추진 중임.
국제기구·원자력국	1. 금년 ODA 예산 증가와 관련하여, 5대 유엔 협력기구(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 유엔개발계획 등)에 지원된 금액 중 북한에 실제로 지원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 우리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 사업은 별도 법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동대북지원은 ODA로 계상하지 않음. ※ 2024년 스위스 및 스웨덴이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해 978,186 미불 지원(유엔인도지원조정실 통계(OCHA FTS) 실기여액(paid contribution) 기준)
	2. 헤즈볼라 근거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함을 고려, 레바논 동명부대의 선제적 철수를 검토할 것	○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통제에 따른 유사시 철수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단, 동명부대 철수는 현지 정세, 유엔에서의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임. ○ 우리 정부는 동명부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동명부대의 안전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2024년 11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	○ 북한 제4주기 보편적정례인권검토 관련 ▲국가보고서 ▲유엔보고서 ▲이해관계자 보고서 ▲실무그룹 보고서 등 관련 자료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4. 유엔인권협약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사항 관련 이행계획서 등 자료를 제출할 것	○ 우리는 8개의 국제인권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각 인권협약별 주무부처*가 관계부처와의 협조 하에 협약 심의(국가보고서** 제출, 견해(권고사항 포함) 접수, 이행 점검 등)를 총괄하고 있음. * 외교부는 8개 협약 중 인종차별 철폐협약 주무부처로 지정 ** 직전 심의 후 위원회가 제기한 권고사항 이행을 포함하여 일정 대상 기간 당사국의 협약 이행현황을 담은 문서 ○ 각 협약별 우리나라가 제출한 국가보고서 및 협약 위원회측의 견해 원문은 OHCHR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국제인권 정보시스템에 국문 번역본도 게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웨스팅하우스의 요구에 따른 체코 원전 수주의 철회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것	○ 1.17일 한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업(한수원,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하였음. ○ 현재 우리 기업(한수원)은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을 위해 체코 발주사와의 협상을 차질없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개발협력국	1. 친한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글로벌 연수사업(ODA)의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국조실에서 통합 관리 중인 약 30개 기관의 연수사업 명단을 코이카와 외교부에 공유할 것	○ 우리 정부가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 대해 경험, 지식, 노하우 등을 전수하기 위해 연수사업 확대 및 내실화 노력을 지속하고 국조실-외교부(KOICA) 간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하겠음.
	2.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등 ODA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 외교부는 「무상원조 사업 집행관리 강화방안('24.2월)」을 통해 ODA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부실·후속관리 필요 사업은 차년도 심사 과정 등에 환류하여 ODA 사업 관리·감독을 내실화해 나갈 것임. ○ 소규모 무상원조 관련, 사업의 집행 정도를 본부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현재 코이카 소유 두 곳의 남미농장이 방치된 상황으로, 아르헨티나에 소재한 농장이 46년째 매년 25만불의 운영비만 지출하고 있는 실정인바, 민간 임대를 통한 개발 등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농장은 현재 민간 임대 개발 활용 위해 절차 진행 중임. - KOICA는 아르헨티나 주정부와 개발범위를 지속 협의 중이며 주정부의 개발허가 승인 완료 이후 임대개발 공모 추진 예정 ○ 칠레 떼노 농장은 현지인 대상 임대계약('24.7월-'26.6월)을 지속하고 있으며, 임대료(연간 22만불)를 활용하여 비용(연간 1.6만불)을 납부하고 일부 수익(연간 0.6만불)을 창출 중임.
	4. 국격에 걸맞은 공적 개발 원조(ODA) 확대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절화 문제 해소를 통해 ODA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	○ (ODA 확대) 정부는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 확대를 위해 ODA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25년 ODA 규모(확정액) : 약 6조 5,010억 원('24년 대비 3.8% ↑) ○ (분절화) 외교부는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체계적·통합적 ODA 추진을 위해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및 「무상원조 관계기관협의회」 기능 강화를 지속 추진해옴. - 향후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ODA 효과성 제고 및 분절화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각 시행기관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보건’ 분야에서 한국이 국제경쟁력과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는바, 보건 ODA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다자보건기구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	○ 한국은 24-27년 임기 집행이사국으로 활동 중인 WHO를 비롯하여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글로벌보건안보채널(FMC) 등 다자보건기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음. - 또한, 글로벌 보건 기구에 대한 지속적 기여를 통해 글로벌 보건 협력 노력을 지속할 예정
	6. ODA 사업 관련, 소규모 무상원조 지원 물품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물품’으로만 표기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충분히 공개 가능한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는 사유로 ‘외교적 사안’이라고 답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	○ 해당 사항은 사안 제기 의원실과 협의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 완료함.
	7. ODA의 컨트롤타워가 없으므로 외교부와 KOICA가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	○ 외교부는 ODA 사업 시행 현지 재외공관과 무상 ODA 전담기관인 KOICA 현지사무소를 기반으로 한국형 ODA 사업의 일관성·통합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집행관리 강화 ▲모니터링 효율화 등 노력을 경주 중임. - 무상 ODA 전담기관인 KOICA 및 각 시행기관의 사업 역량 강화 및 연중 사업 이행 현황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유상 ODA와 무상 ODA가 서로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비효율적이고, 무상 ODA의 경우 46개 기관이 1976개 사업을 각각 진행하여 중복되는 사업이 많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 정부는 ODA 사업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유무상 연계 강화를 지속 추진 중임. - 또한 외교부는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 무상 사업 간 중복을 방지하고 외교 정책 및 사업 간 연계 심사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임. ○ 향후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통합적·체계적 ODA 추진체계를 강화하겠음.
	9.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유상 ODA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바, 무상원조 비율을 높일 것	○ 유·무상 비율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40:60 유지를 원칙으로 매년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가고 있음. ※ '25년 무상원조 규모(확정액) : 약 3조 2,951억 원('24년 대비 6.4% ↑) - 향후 국제적 권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무상 비율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
	10. 작년 부터 기재부의 對미얀마 EDCF 사업이 재개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미얀마 군부에 이익이 되지 않도록 점검할 것	○ 외교부는 우리 정부 방침('21.3월)에 따라 對미얀마 개발협력 사업을 제한적으로 추진 중임. - ▲인도적 지원 ▲기발굴 사업 중 민생 직결·추진 불가피 사업 지속 ○ 동 정부 방침이 현재 유·무상 사업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할 예정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미얀마 인도적지원에 있어서 보다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KOICA나 외교부가 현지 공관과 협력하여 여건을 마련할 것	- 구체 EDCF 사업추진 현황 관련, 유상원조 주관기관인 기재부와 협의 요망 ○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정부는 현지 공관 및 KOICA 사무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지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보유한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국제법률국	1. 7광구 문제를 외교적·경제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정상회담 등을 통한 새로운 방안을 검토할 것	○ JDZ 협정 관련, 외교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학계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해양 국익 수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오고 있음. - 아울러, JDZ 협정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일측과 접촉 계기마다 다양한 레벨에서 지속 소통 중
양자경제 외교국	1. 부산엑스포 판세 메시지의 3급 비밀 지정이 적절했는지,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지정한 것은 아닌지, 예고문 변경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	○ 해당 비밀문서의 지정은 상대국과의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짐. ○ 비밀문서가 예고문대로 재분류기간이 도래하였더라도 재분류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비밀문서로 간주되는 바, 상대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감안하여 해당 비밀문서의 재분류 조치를 하지 않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미 대선 이후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바, TF 구성 등 범정부적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할 것	○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미 대선 전부터 지금까지 경제부총리 주재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포함해 각급에서 범정부 회의체*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미 신행정부 경제정책 동향 및 영향을 긴밀히 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책을 모색해 오고 있음. * (장관급)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 (1급) 미 신정부 대응태세 점검회의 등
	3. 트럼프 이후 미국의 경제·무역 정책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대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할 것	○ 아울러, 정부는 우리 업계와도 수시로 간담회 및 개별 면담을 가지며 미 신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민·관 차원의 조율된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해 오고 있음.
	4. 희토류 등 광물 70~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바,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부는 중측의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등을 통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한중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음. ○ 동시에 정부는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공급망 안정 및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음. * △제 1차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개최(2025.2.5.) △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수임 △ 제2차 한-몽골 희소금속 협력위원회 지원(2025.3.12.)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우리 기업이 포함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대비할 것	○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하여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왔으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및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하며 소통해 나갈 계획임.
유네스코 협력 TF	1. 유네스코 TF팀의 출장 기록을 제출할 것	○ 해당 자료 제출을 완료하였음.
	2. 사도광산에 전시된 한반도 출신 노동자 관련 자료들 중, 한반도 출신 노동자 1,140명의 미지급 임금이 예탁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바, 이 명부에 대해 확인, 확보하고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해당 자료는 당시 사도광산에 1,140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있었고 이들이 임금 조차 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 ○ 외교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제공을 일촉에 요구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노력을 지속할 예정
	3. 사도광산 전시관의 ‘조선 반도 출신자’라는 표현에 대한 역사적 사실 왜곡을 지적하고 ‘조선인’으로 수정하도록 조치할 것	○ 수많은 한국인들이 일제 강점 하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노역에 종사한 것은 역사적 사실로서 부인 불가 ○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일본 스스로도 2015년 세계유산위에서 인정한 바 있으며, 2024년 사도광산 등재시에도 일본 대표는 해당 발언을 명심한다고 언급 ○ 우리측은 국제사회 발언 및 우리 문서 등에서 ‘한국인’, ‘조선인’ 등 표현을 사용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외교전략 기획국	1. 정부가 사용하는 외교 안보 구호인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용어는 자기 과시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줄 소지가 있는바, 이 용어의 계속 사용에 대하여 점검 할 것	○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下 특히 다자무대에서 국격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함. ※ 1차 국정감사(2024.10.7.) 당시 외교부장관은 ‘글로벌 중추국가’는 다자외교에 가장 잘 적용되는 비전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은 다자 외교에서 선진국·개도국이 모두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할 때 라고 생각한다고 답변
	2.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미국의 인태전략 사이의 차별점 및 인태전략 이행을 위한 예산 상황에 대해 정 리하여 보고할 것	○ 2024.10.28. 서면으로 기보고하였음.
외교정보 기획국	1. 외교정보기획국이 국정원 등과 협력하여 정보 커뮤니티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것	○ 국정원과 협력 下 국내 각 부처의 정보 커뮤니티를 규합, 상호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음. -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 운영 체계 활성화를 통해 범정부 정보 수집 역량 제고에 적극 기여 -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조사·분석 능력 제고 및 직원 역량 강화 ※ 미국의 경우, 정부 각 부처의 17개 정보 기관을 통해 정보공동체를(Intelligence Community, IC) 운용 중 - 특히 외교부로서는 고유한 외교정보기관 운영 경험 및 역량을 갖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여타 선진 우방국가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외교정보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양자협력 MOU 체결 추진 등)하여 주요국과의 외교정보 제휴 강화 및 중요 정보 접근성 제고에 기여 - 주요국 소재 전문 싱크탱크와의 컨설팅 계약 체결 확대를 통해 ▲국제 정세 주요 현안뿐 아니라 ▲경제·사회·과학 국제사회 주요 트렌드 ▲주요 공급망 관리 ▲기업 진출 정보 등 확보 노력을 통해 민간 정보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한반도 정책국	1.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준비할 것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는 긴밀히 소통해왔으며, 특히 한미 외교장관회담 및 한미일 외교장관회담(2.15)을 통해 대북정책 수립 이행 관련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음. ○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갈 것임. ○ 특히, 미국이 구체 대북정책을 검토해나가는 과정에서 각급에서 미측과 소통과 정책 조율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임.
	2. 핵 확산이 우려되는 와중에 미 대선 전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대비할 것	○ 우리 정부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 북한의 핵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대비하고 있음.
	3. 미국 내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의원들과의 한반도 평화 촉진을 위한	○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기 위해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토론 등 더 많은 지지 획득 방안을 모색할 것	○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에 일절 호응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2023년 말부터는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면서 남북 단절을 고착화시키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음.
	4. NLL에 대한 국제법상의 논리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	○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下 북한의 어떠한 일방적인 주장과 위협,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며, 대응 논리도 발전시켜나갈 것임.
국제안보국	1. 사이버안보가 국가안보에 직결되므로 사이버 보안법 강화 및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	○ 동 건 관련,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임.

Ⅱ. 외교부 재외공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미국 대사관	1. 중소벤처지원협의회, 경제 안보 전문관 제도 관련 구체 애로사항 해결을 노력할 것	○ (중소벤처지원협의회) 기존 산업통상 자원 유관기관 협의회를 확대 개편 하여 분기별 1회(기존 반기 1회)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협의체 운영 내실화에 힘쓸 예정 ○ (경제안보전문관제도) 적절한 역량 보유 인력을 지속 채용할 수 있도록 본부와 처우·보수 점진 개선 지속 협의 중
	2. 대사관 애로 및 건의사 항(행정직원 처우 개선, 청사 노후화, 핵심신흥 기술 및 공공외교 전담 인력 확충) 해소 지원 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 출할 것	(행정직원 처우 개선, 인력 확충 관련) ○ 초임 기본급 인상 등 처우 개선 조치 (‘24.11월 기시행)와 더불어 우수 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 ○ 공공외교 전담 행정직원 1인 신규 채용 (‘25.3월부터 근무) 및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파견 대상 공관 선정(‘25.6월 부터 6개월간 파견) 등을 통해 인력 확충 노력 (청사 노후화 관련) ○ 청사 재건축 필요성 관련 참고자료 별첨
	3. 북한 비핵화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를 노력할 것	○ Trump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간 북한 비핵화 관련 협의를 진행함. - 이후 미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견지 입장을 표명함. ○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변화된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대북정책의 변화를 마련할 것	○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및 러북 군사협력 등을 통해 북한의 위협 수준이 달라진 만큼, 한미 양국도 확장억제 및 연합 방위태세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 중임. - 또한,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관련 국제사회 공조를 계속 견인해 나가고자 함. ○ 한편,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에도 열려 있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음. - 향후 대북 관여가 재차 추진된다면, 이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 확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임.
	5.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관해 미국과의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	○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미 간 평화적 원자력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함.
	6. 체코 원전 수주 관련, WEC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산업부 장관 - 미 에너지부 장관 면담 및 실무급 면담 지원 등 대사관 차원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노력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한미 의회교류센터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	○ ▲對의회 아웃리치를 통한 한미관계 발전에 대한 지지 제고, ▲미 의회 친한(親韓) 네트워크 확장 및 ▲양국 의회 간 교류 활성화 지원 등 지속 추진 예정
	8. 대사관 내 외교부와 정보기관 간 업무 분장을 할 것	○ 공공외교는 대사관 내 외교부 파견 직원들이 담당하는 등 정보기관과 업무 분장에 유념 중
	9.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내 전시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할 것	○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25.1월부터 음성가이드 안내시스템 전면 도입을 통해 개화기 공관원들의 미국 내 활동, 한미 간 외교 활동을 소개하는 등 스토리텔링 강화
	10. 광역 지자체 차원의 한미 문화교류를 확대할 것	○ 한미 지자체 간 교류 관련 당관 역할이 필요한 사항들 적극 지원 (△'24년 9월 스미소니언-경상북도 공예특별전 지원, △'25.3월 미국 일리노이주 콜롬비아시 시장 방한 계기 서울시측과 접촉 지원 등)
	11.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 투표소를 최대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포언론 대상 보도 자료 배포·한인 밀집 지역 방문 등 활동을 통해 동포사회에 대한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자 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재외국민 안전 전담 경찰 주재관의 총영사관 파견을 확대할 것	○ 안전 전담 실무급 경찰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회 되는대로 본부에 전달하겠음.
	13. 플로리다 주 내 출장소 재개설을 검토할 것	○ 플로리다 지역의 위상 및 중요성을 감안, 본부에 플로리다 내 재외공관 개설을 건의함.
	14. 행정직원 급여 문제를 개선할 것	○ 신규 채용직원 초임 기본급 인상(24.11월) 및 기본급이 워싱턴 DC 최저임금보다 낮은 제3국적 행정직원의 보수 인상(25.3월) 등 조치
	15. 청사 노후화 문제를 개선할 것	○ 2026년 신규 국유화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 예정
주유엔 대표부	1. 이스라엘 관련 사태 진정을 위한 안보리 차원의 적극적 행동을 모색할 것	○ 2024.11월 여타 비상임이사국들과 공동으로 가자 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 요구를 위한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상정하였으며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로 부결), 이후에도 가자 상황 개선을 위한 안보리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2. 대북전단살포 단체들의 행위가 제재 위반인지 정리해서 보고할 것	○ 유엔 안보리 결의상 USB, 라디오 등이 HS 코드상 대북 공급, 판매, 이전이 금지되는 산업용 기계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나, 특정 상황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는 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취지와 목적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생명, 의료, 식량 접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여 문제에 대한 전략을 확보할 것	염두에 두고 구체 사안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제재위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식량·의약품 등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물품에 대해서는 對北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음. ○ 아울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 관련 제재 예외도 인정하고 있음. ○ 북한 주민들의 빈곤 및 열악한 의료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 정권이 국가 자원을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수년간 거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유엔 관련 기관 직원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북한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우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국가 자원을 사용할 것을 지속 촉구하고 있으며, 안보리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 및 관련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를 지속 압박, 견인해 나갈 것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안보리 등 유엔에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 악화는 제재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정책 때문이라는 올바른 인식이 형성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중·러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인식이 유엔 내에서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음.
	4. 다중적 복합 위기 속에서 새로운 어젠다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	○ 최근 국제사회는 무력분쟁, 기후위기, 개발재원 부족 및 인도적 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바, 이런 가운데 여타 선진국과 달리 역사적 부채와 숨겨진 어젠다가 없는 우리나라가 유엔과 같은 주요 다자 무대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음. ○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리, 인권 이사회, ECOSOC 이사국을 모두 수임하고 있으며, 유엔 분담금 및 세계 ODA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평화안보, 개발, 인권 등 유엔의 전통적인 3대 영역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도 논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모색 중임. ○ 예컨대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AI 분야의 경우, 작년 서울 AI 정상회의 개최에 이어, 미래정상회의 계기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채택된 글로벌디지털컴팩트 (GDC)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 2024.6월에는 안보리 의장국 수임 계기 대표행사로서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사이버안보 관련 최초의 안보리 대면 공식회의를 개최한바, 안보리 15개국을 포함한 약 70개국이 참여하여 안보리에서 사이버안보 등 신형안보 위협 논의를 촉진하는데 기여하였음. ○ 또한, 확대된 ODA를 바탕으로 주요 유엔기구와 개발·인도지원 협력에 있어서 평화구축활동(peacebuilding) 강화와 인도지원·개발·평화 연계 (HDP Nexus) 등으로 협력 분야를 다양화해 나가고 있음. ○ 앞으로도 우리 대표부는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어젠다 구축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자 함.
	5. 3대 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유엔 무대에서의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할 것	○ 우리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주요 국제 지역 현안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사이버안보,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WPS) 및 기후안보 등 우리 안보리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안보리 내 주제별 이슈 논의 진전을 위해서도 노력 중임. ○ 국제정세에 따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간 동학 변화 및 리더십 약화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E10)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우리는 국제사회 내 우리에게 대한 기대와 위상에 걸맞게 안보리 이사국 임기(2024.1월-2025.12월) 동안 국제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안보리의 글로벌 현안 대응 노력에 주도적인 참여를 지속할 예정임. ○ 한편, 우리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이사국으로서 유엔총회 2위원회(경제·금융) 논의 및 ECOSOC 고위급정치포럼 등 주요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 논의에서 우리의 SDGs 이행 협력 의지를 적극 개진해 나갈 예정임. ○ 아울러,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개도국 인권 역량 강화, 디지털 시대의 인권 증진, 취약계층 인권 보호 등을 우선순위로 활동해 나가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또한 북한 인권상황 논의에 있어 특히 최근 러-북 불법 군사협력으로 인한 북한 인권-국제평화안보 간 연계 문제 등 지속 제기
	6. 기후변화 대응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국제사회의 동향을 본국에 전달할 필요	○ 유엔 사무총장 주관 기후정상회의 동향, 사무총장 주요 연설, 유엔본부 내 기후변화 관련 결의안 협상 등 주요 동향을 수시로 본국에 전달하고 있으며, 관련 유엔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주뉴욕 총영사관	1. 문화원 정식 개원에 맞추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필요	○ 신청사 개원 첫 해인 2024년 문화원 개최 행사는 80여건으로 2023년 대비 4배가량 증가했고, 2024년 문화원 방문객은 2만여 명으로 2023년 대비 10배가량 증가했음. ○ 2025년에는 현지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견학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한국특집공연 및 백남준 특별전 등 한국문화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임.
주멕시코 대사관	1. 2025 멕시코 한인이주 120주년 기념사업 준비현	○ 서면 보고 자료는 기획재정담당관실을 통해 기제출(2024.10.30.) 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황 및 예산 심의 현황 등 구체 내용을 외통위에 서 면 보고할 것	○ 25.3월 기준 추가적인 준비현황 및 예산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준비현황) 외교부, 재외동포청, 국가보훈부, 인천광역시, 국기원 등 국내 관계기관과 멕시코시티 과우테목구청 및 메리다 시 등 현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구체계획 수립중 ※ 한국의날기념 주간행사(한국의 날 기념 행사, 한인체육대회, K-Music 공연, 사진전, 한식 소개 등), 멕시코 한인이주 100주년 기념탑 보수, 지역 한인후손회 차원의 한국의 날 기념행사, 멕시코 한인후손 인구조사, 메리다 송무학교 기념비 조성,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방문, 한국영화제, 광복절 기념행사, 한인후손 방한 초청 등 추진 예정 - (예산현황) 재외동포청에서는 한인이주 120 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을 추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금년 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함. 그러나, 당 관에서는 재외동포청, 국가보훈부, 문화 체육관광부, 국기원, 한국영화진흥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상기 언급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2. 국세관 신설 및 몬테레이 분관 문제에 대해 정리하여 보고 할 것	○ (국세관 신설 관련) 2025.2월 신임 국세관 파견 완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다만, 당분간 직무파견 형태인바, 향후 정식 직제화 필요 ○ (몬테레이 분관 설치 관련) 당관은 주요 인사 방문 등 다양한 계기 몬테레이 분관 개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현재 까지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각 계기별 분관 개설 건의 현황) - 23.3. 영사출장소 개설 건의 전문 발송 - 23.5. 박진 외교장관 방문시, 동포사회 건의 - 23.11. 김진표 국회의장 방문시 동포사회 건의 - 24.5. MKTA 국회의장회의 대표단앞 건의 - 24.11. 대통령 특사(이상민 장관) 방문시 건의 - 24.11. 국정감사 대표단앞 건의 ※ (몬테레이 분관 개설 필요성) 22년 기준, 대사관이 소재한 멕시코시티 한인 2,483명을 넘어서 4,612명(멕시코 전체 한인의 35%)이 거주하고 있으나 대사관 소재지와 물리적 거리(1,000Km로) 인해 신속한 사건사고 대응이 불가하여, 여타국과 비교되는 우리 영사서비스 대응 역량에 대한 국민 불만 누적 -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등 주요 10개국 몬테레이에 총영사관 운영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멕시코 정부, 의회 및 차세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접촉과 네트워킹을 강화할 것	○ 우리 대사관은 금년도 멕시코 정부, 기업, 학계 등 주요 인사와의 수시 접촉을 통해 정부·과학기술·개발협력 등 다방면에서 외교 기반을 강화 중임. - △미주역사지리연구소(IPGH) 사무총장 면담(25.2월), △멕시코국립자치대(UNAM) 교수 및 이베로아메리카나 대학 교수 면담(25.2월) 및 △외교부 북미외교전략국장 면담(25.2월), △기술혁신차관 면담(25.2월), △국영석유기업(PEMEX) 총재 면담(25.2월), △개발협력청(AMEXCID) 청장 면담(25.3월 KOICA 이사장 방멕시코 계기), △반부패·좋은행정부 차관 면담(25.3월) 등 ○ 향후 주재국 의회 및 차세대 지도자와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음.
	4. 주요 대학 내 한국어학과 설치 확대를 모색하고 한류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	○ 주요 대학 내 기존 한국어 프로그램 내실화(교원 파견*, 교육자료 지원** 등) 지원 및 한국어 프로그램 신설*** 지원 모색 중 *나리트자치대, **우남대, ***이달고자치대 ○ 대학교 어학당 한국어 수강생 대상 한국 문화체험 행사 등 한류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멕시코와 같은 중견국과 지역 질서 형성 기여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	○ 멕시코는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중견국으로서 양자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MIKTA, G20 등 소·다자 협의체를 통해서도 활발히 협력하고 있음. ○ 우리 대사관은 올해 디지털정부사절단 방백 계기 「제2차 한-멕시코 미래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반도체·지적재산권을 주제로 「제3차 한-멕시코 경제포럼」 개최를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멕시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임. ○ 특히, 작년 MIKTA 의장국을 수임한 멕시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올해 한국의 MIKTA 의장국 수임을 지원하고, 오늘날 국제사회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견국 협의체로서 다자협력 확대에 기여해 나갈 것임. * 대사관은 당지 개최 제10차 MIKTA 국회 의장회의(24.5월), 제4차 MIKTA 개발협력 기관 고위급 회의(24.7월) 참석 지원
	6. 쿠바 방문 시 美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 불가에 대한 공지를 할 것	○ 우리 대사관은 동포간담회, 순회영사 등 각종 계기마다 동 내용을 공지하고 있으며, 금년 개설한 주쿠바대사관 홈페이지(정보마당-안전여행정보)를 통해 우리 국민이 해당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쿠바 내 문화외교를 추진할 때 협업을 모색할 것	○ 금년 개설한 주쿠바대사관은 외교부 본부 및 유관기관(KF 등) 등과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주재국 당국(외교부, 문화부)과도 행사 관련 사전 협의 등을 통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8. 한-멕 FTA 진행 시 공동타당성 조사 등의 조사를 실시할 것	○ FTA 협상 재개에 대한 멕시코의 미온적 입장을 고려, 우선 과거에 실시한 FTA 타당성 공동연구 현행화 작업을 추진할 것을 각종 접촉 계기마다 제안 중
	9. APEC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FTA 해법을 모색할 것	○ 25.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활용한 한-멕 FTA 협상 본격 출범을 위해, 11월 정상회의 이전 실무 협의 적극 추진
	10. 소노라 지역 한전 태양광 프로젝트 관련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살필 것	○ 공관장의 한전 상임감사(1.15) 및 운영이사(1.30) 면담 등을 통해 추진현황을 공유 중으로, 필요시 측면 지원 추진(엘마요 태양광 인허가 진행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2025 멕시코 한인이주 120주년 기념사업 관련 현황을 보고하고 사업을 발굴할 것	○ 2025 멕시코 한인이주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본부, 재외동포청, 국가보훈부 등 국내 관계기관 및 현지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중이며, 한인후손회 등 재외 동포사회가 중심이 되어 한국주간행사(5월) 및 여타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구체계획 수립중 ○ 향후 추진 예정 사업은 아래와 같음. - 한국주간행사(한국의날기념행사,한인체육대회, K-Music 공연, 사진전, 한식 소개 등), 멕시코 한인이주 100주년 기념탑 보수, 지역 한인후손회 차원의 한국의 날 기념행사, 멕시코 한인후손 인구조사, 메리다 송무학교 기념비 조성,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방문, 한국영화제, 광복절 기념행사, 디지털영상공모전, 한인후손 방한 초청 등
주과테말라 대사관	1. 과테말라 교과서 내 한국 관련 내용 및 한국 수업 등을 지원할 것	○ 2020년부터 외교부 및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하에 과테말라 국정 교과서 및 민간교과서에 한국 관련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현재 현지 국공립 초·중등 16개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 우리 대사관은 주재국 교육부 및 출판업계와 우호·협력관계를 지속하면서 동 사업을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 한-중미 FTA 발효 시 관련 사항에 유의할 것	○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협정은 지난해 말 대통령 재가를 마치고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현재 국회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음. - 우리 대사관은 최근 주재국 국회에 설립된 과-한 의원친선협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 중임. - 동 FTA가 양국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교두보가 되도록 주재국 정·재계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임.
	3.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과의 협조에 노력할 것	○ 우리 대사관과 주재국 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동포 밀집 지역별 관할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장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음. - 우리 국민 보호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KF(국제교류재단) 해외유력인사로 주재국 경찰청장을 초청(5.11.~17.), 한국 경찰청에서도 매년 주요 경찰간부 초청(24년 12경찰서장, 25년 15경찰서 부서장) - 법집행기관 인사들의 방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 KOICA 국별연수프로그램 실시 건의한 상태임 - 치안 ODA사업(경찰고등교육원 신설) 내실 있는 추진 및 우리 경찰청 치안전수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 중 (25년 주재국 국과수 대상 우리 경찰청 전문가 교육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초청연수 등을 통해 지한파, 친한파 육성에 힘쓸 것	○ 우리 정부의 초청연수 프로그램 등으로 3차례 방한한 전직 경찰청장(Nery Ramos)이 최근 과테말라 국회의장으로 당선되는 등 그간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전임 부통령(Guillermo Castillo) 등 다양한 주재국 주요 인사들이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지한파, 친한파로 활동 중인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임.
주엘살바도르 대사관	1. 탄소 배출 감소 노력과 관련하여 중미 국가들의 협력 방안을 공유할 것	○ 현재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멕시코-중미 3개국(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간 삼각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산림경관복원 사업을 진행 중('22~'25)이며, 중미통합체제(SICA)를 통해서도 역내 국가들의 친환경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이들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주요 사항 파악시 보고하겠음. ○ 벨리즈에 설치된 '카리브해 기후변화 센터'의 사례가 여타 중미 지역으로 확장될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필요시 보고하겠음.
	2. 한-중미 FTA의 긍정적 효과 유지를 위한 방안을 고민할 것	○ 한-중미 FTA의 확대 모멘텀 유지를 위해 특히 주재국 노동 인력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바, KOICA 사업 등을 통한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우리 대사관은 한-중미 FTA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한-엘비즈니스포럼을 개최하여 양국 기업들에게 정보 교환 및 실제 거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25.9월 개최예정).
	3. 엘살바도르 내 CCTV 종합관제센터 설립 등 성과가 중미 지역 전체로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	○ 치안 개선 관련, 주재국의 CCTV 종합관제센터 설립과 같은 시기에 인근 과테말라의 경찰교육 시스템 개선 사업, 온두라스의 생활 및 도로 방법 CCTV 설치 사업 등이 KOICA를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된 바 있음. ○ 상기 사업들의 사후 점검 계기, 성과와 노하우를 역내 국가들 간 공유하면서 추가 지원 및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음.
	4. 치안 상황 평가 시 범 죄지표 활용, 치안 정책 자문관 파견, 경찰 엘리트 유학 등을 통한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전파할 것	○ 주재국의 경찰 엘리트들이 KOICA 연수 사업 등에 참여토록 하여 이들에게 한국의 선진 치안 시스템을 교육하는 방안을 포함, 양국 간 치안 관련 정보 및 인적 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주도미니카 공화국대사관	1. 에너지 협력에 있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분의 국외감축분 확보를 감안하여 추진할 것	○ 2024.12월 주재국과 ‘에너지 시장 및 전환 세미나’를 개최하여 주재국 전력 산업 현황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 - 아울러, 우리 기업의 활동을 홍보하고, 사업 기회 발굴을 지원 ○ 향후, 에너지 협력 사업 추진시, 우리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을 위해 한-도미니카공화국 간 협력 기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계획
	2. 아이티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	○ 2024.5.1. 아이티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 따라 아이티 내 체류 재외국민에 대한 일일 안전 점검 및 동 체류 현황에 대한 주간 보고를 지속 실시 중 ○ 앞으로도 아이티 정세, 치안 동향 등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지속 예정 -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1. 미 교과서에 대한 한국의 역사 및 발전상 반영 등 우리의 소프트파워 확산 방안에 대한 현황 및 전략 아이디어를 보고할 것	○ 미국 캘리포니아주 역사·사회 교과 교육과정 지침 개정이 예정되는 상황으로, 지침에 한국 발전상 관련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미국 교과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주요 재미한인학자, 교육행정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 관련 전략을 논의함(~24.12월) * 재미한인 공동체를 통해 지역구 의원을 설득, 현장 교사 및 교육행정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의 역사 및 사회상을 다룬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등 ○ 상기를 위한 전략적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2025년부터 의무화된 인종학 수업에 대비*하여 그간 ‘한인사 인종학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고, 전자도서관을 구축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여 관련 교수학습자료를 공유하였음. * 2021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50개 주 중 최초로 인증학을 공립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2025년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 인증학 수업 제공이 의무화 ○ 2025년에는 현지 교과서를 분석하고, 출판사와 교류하여, 한국의 역사·사회상에 대한 교육자료를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한 분위기를 지속 조성해 나가겠음.
	2. 65세 이상 국적 회복 및 신청 현황 자료를 보고할 것	○ 재외공관에서는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국적 회복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며, 한국에 입국한 후 국내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기관(법무부)에 신청해야 하는바, 총영사관 차원에서 관련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구체 통계는 법무부(출입국관리기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국적회복 관련, 우리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들로부터 민원 전화나 순회영사 상담 등을 통해 수시로 관련 문의를 받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설명 및 안내 - 공관 홈페이지 영사 코너(국적)에도 관련 정보를 게재
	3. 재외동포청 영사 및 순회영사 인력 및 예산 확충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할 것	○ (재외동포청 영사 확충) 과거 동포 영사 2인(외교부 1인, 동포재단 직무파견 1인) 체제로 유지해 왔으나, 2023.6월 재외동포청 출범 계기 동포재단 직무파견자가 귀임한바, 전문성을 갖춘 재외동포청 직원을 조속히 충원하는 것이 긴요한 상황임. ※ 현재 공공외교 담당 영사가 일부 동포 업무(차세대 동포단체, 재외동포단체 지원금 등)를 분담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재외동포청은 우리 총영사관 동포업무 전담 직원 파견을 위해 관계부처(행안부, 기재부 등)와 협의하면서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파견시 막중한 동포업무가 원활해지고 다양한 동포사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순회영사 인력 확충) 원거리 관할지 순회영사 업무 폭증으로 순회영사 인력 (영사 1명, 행정직원 2명) 증원이 필요함. - 인력 확충시 민원 서비스 제고 효과 기대 ※ (오렌지카운티) 주 1회 → 2회로 확대 가능 / 2023년 기준 업무 건수는 약 7,300여 건으로 인력 증원시 연간 14,000건 이상 처리 가능 (샌디에고) 월 1회 → 월 2회 / 2023년 기준 샌디에고 순회영사 업무 건수는 약 2,500여 건으로 인력 증원시 연간 5,000건 이상 처리 가능
	4. 관할지역 한인의 마약 중독, 투옥, 범죄연루, 국내 출입국 등과 관련한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 요청 자료는 미국 내 마약중독자 또는 마약사범 중에서 한인 비율, 그중에 시민권자/비시민권자(재외국민) 비율, 이들의 국내 출입국 현황 등의 통계 자료로 이해됨. ○ 이와 관련, 미국은 인권 존중 및 차별 방지를 위해 법 집행시 국적 및 체류 신분을 묻지 않으며, 이에 부합되게 미 질병예방 통제센터(CDC) 등 관련 당국은 마약 중독자/범죄자 관련 통계에 인종, 체류 자격에 따른 분류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함. - 대학연구소, 지방사설기관 등에서 자체 추정 아시아계 통계가 발표되는 경우가 있으나 공식 통계는 아님(일부 언론보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 다육 식물(두들라에) 사건 관련 범죄 혐의자에게 긴급여권이 발급된 경위 자료를 제출할 것	○ 2018년말 멸종위기 식물 불법 채취로 우리 국민 3명이 캘리포니아 당국에 체포되었고, 총영사관은 2019년초 이중 1명에 대해 여권 분실신고에 따른 긴급여권을 발급함. ○ 이는 사건 당시 적용되었던 여권법(2017.6.22 시행 여권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음. - 동 법률에서 규정*된 거부 또는 제한 사유가 아닌 경우 자의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불가 * (2017.6.22 시행 여권법) 동법의 12조 1항 1-4호는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사유를 규정 - 아울러, 범죄지 국가(미국)에서도 다육식물 사건 연루 우리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총영사관에 요청해 온 바 없었음. ※ 통상적으로 미 당국에서 불법체류 또는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시에는 우리 국민을 강제 추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오히려 우리 총영사관에 여권발급 제한이 아닌 여행증명서 발급을 요청
	6. 유학생 졸업 후 노동 착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 현황을 외교부 등에 보고하고 본부와 협력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 (현황) 현재 유학생 OPT* 기간 노동착취에 관한 전체적 통계 및 유형별 사례는 없는 상황임. *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학위취득 유학생이 전공 관련 분야에서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허가 제도(통상 12개월, 이공계는 36개월)/ OPT 신청 후 노동허가증(EAD)을 받은 이후 노동 가능/반드시 유급으로 일해야 한다는 제한 조건은 無 - 단, 총영사관은 2021년 이래 우리 유학생 포함 청년 대상 취업·창업 설명회 및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운영 중(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상담 포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향후 대책) 총영사관은 공관 홈페이지·SNS 뿐만 아니라, 취업·창업 상담회 및 법률자문 등 여러 행사 계기 관련 우리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지속해 나가겠음. - 주미국대사관 및 미국지역 내 총영사관들과도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본부에도 보고하여 본부 차원의 대미 개선책 마련 등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 지원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1.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공관 사무실 추가 확보와 행정직원 처우 개선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할 것	○ 국정감사 수감 이후 해당 자료 제출하였음(24.10.23).
	2. 미국 교과서 내 한국의 역사 및 발전상 반영 등 우리의 소프트파워 확산 방안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바, 관련 현황 자료를 보낼 것	○ 국정감사 수감 이후 해당 자료 제출하였음(24.10.23).
	3. 유학생 취업 지원 사례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	○ 국정감사 수감 이후 해당 자료 제출하였음(24.10.23).
	4. 전세계 평균 대비 낮은 재외선거 등록률에 대한	○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시 한인회, 민주평통, 동포언론, 한인교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외선거 관련 홍보를 다각적으로 펼쳤으며, 향후 재외선거시 상기 단체뿐만 아니라 한인단체 및 재외국민과의 접촉면을 더욱 확대하여 재외선거 등록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임.
주오이시디 대표부	1. 오이시디 사무국 내 파견자 직급 상향을 위해 노력할 것	○ 현재 오이시디 사무국 내 고용휴직 파견자 직급은 “OECD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OECD에 대한 공무원 파견에 관한 협정”에 따라 A4(현재는 PAL7) 직급으로 운영되고 있음 ○ 향후 파견자의 직급 상향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오이시디와 적극 협의하겠음
주프랑스대사관	1. 프랑스 주재 한인 프로덕션의 유학생 임금 체납 관련 경위 파악 및 우리 유학생 피해 방지를 위해 주의할 것	○ 우리 대사관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 2022.6월 우리 대사관은 BH 프로덕션에 동포행사 계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응원 영상 및 tv용 슬라이드 제작을 의뢰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선금 및 최종 정산을 완료하였음. - 또한 2022년 문화원은 해당 업체와 ▲한식 교육 비디오 제작(4-5월) ▲결의만남 목판화전 촬영(4-6월) ▲하반기 활동 홍보 영상 제작(11-12월)*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 정산을 완료하였음. * 해당 유학생 폭로글 작성 시점(2022.11.12.)에는 이미 계약 체결 완료 후 사업 진행 중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상기 계약 관련 우리 대사관(문화원)에 지불 지연 등의 민원이 제기된바 없으며, 논란 이후 우리 대사관(문화원)은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 ○ 우리 대사관은 계약 체결 시 업체측이 주재국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추후 업체 선정 심사 시 관련 사항을 반영해오고 있음. -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음.
	2.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예산 내역을 제출할 것	○ 우리 대사관은 당지 BIE 대표 대상 면담 및 문화원 등 홍보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교섭 및 홍보 활동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본부 지시에 따라 당지 방문 출장단을 지원함. - 외교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사업 예산으로 '22년 14.84억원, '23년 18.95억원을 확보(현액 기준)하여, '22년 11.52억원, '23년 18.57억원을 집행
	3. 성범죄 등 강력사건에 대해 관심을 제고할 것	○ 성범죄의 경우 2019년 9건으로 특별하게 집중발생한 경우 제외하고, 연간 1-3건 발생하고 있음. ○ (예방활동) 우리 공관에서는 공관 홈페이지, SNS 및 동포 언론지를 통해 수시로 강력사건 관련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안전공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 교민 / 유학생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강력사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사건대응) 강력사건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통역 지원 등의 영사조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주재국 당국 대상 협조 요청 성범죄의 경우 2019년 9건으로 특별하게 집중발생한 경우 제외하고, 연간 1-3건 발생하고 있음. ○ (예방활동) 우리 공관에서는 공관 홈페이지, SNS 및 동포 언론지를 통해 수시로 강력사건 관련 안전공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 교민 / 유학생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강력사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사건대응) 강력사건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통역 지원 등의 영사조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주재국 당국 대상 협조 요청
	4. 대사관 SNS 내 유용한 정보 게시를 확대할 것	○ 우리 대사관은 △페이스북(구독자 약 1.2만명) △인스타그램(구독자 약 9천명) 등 SNS 채널을 활발히 운영 중이며,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국·불문으로 게시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2025년 1-3월(3.13 기준) 인스타그램 신규 게재 건수 65건 : ▲안전 공지, ▲영사서비스 안내, ▲취업설명회 등 한국 관련 행사 개최 안내, ▲한국 문화 소개(음식, 영화, 절기 등), ▲공관 활동 등 ○ 앞으로도 한국과 프랑스 국민들을 대상으로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해나감으로써 교민 편의를 제고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사관겸 주북대서양 조약기구 대표부	1. 공급망실사지침 발효와 관련된 홍보를 진행할 것	○ 매년 대사관 주최 경제 현안 간담회를 통해 현지 주재 우리 기업 대상 공급망실사지침을 비롯한 EU 정책 관련 사항 안내 및 애로 사항 청취 * 우리 공관 : 경제현안간담회(2023.9월, 2024.4월)에 이어 스웨덴(24.11월), 폴란드(24.11월), 오스트리아(24.11월) 방문하여 우리 기업 대상 순회 설명회 개최 * 산업부 및 유관기관과 협업 下 공급망실사지침 Q&A 제작/배포, 업계설명회 등 기진행 ○ 매주 주EU대표부에서 작성하는 ‘주간 포커스’를 통해 EU 정책 관련 사항 동향 공유 및 대표부 홈페이지 게재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유럽연합과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한-EU FTA를 기반으로 경제, 통상 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과학기술 등 새로운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을 위해 노력중 ○ 2025.3.10. 제12차 한-EU 무역위원회 계기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타결, △지정학적 이슈, 신통상 이슈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설치 등 ○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이행 가속화를 위한 반도체, 5G·6G, 양자기술,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등 분야 협력 추진중 ○ 나노, 바이오, 에너지 등 한-EU 전략적 협력 분야에서 공동 R&D 등 과학기술 협력 강화중(2025년부터 EU의 최대규모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
	3.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토록 방안을 마련할 것	○ EU 집행위, 유럽의회 등 EU 기관과 긴밀한 소통과 모니터링을 통해 중국산 전기차 대상 관세 부과 관련 정보를 적시에 파악, 분석하여 본부 및 기업에 전달하고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유네스코 대표부	1. 사도광산 관련 세계유산 위원회에서의 결정 과정 및 등재 결정 취소 혹은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보고할 것	○ 세계유산위원회 관행상 세계유산 등재는 대체로 컨센서스(아무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상태)로 결정되며,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례적인 경우에 투표를 실시함. ○ 현 상황이 세계유산위원회 관련 규정상 등재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재협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주스페인 대사관	1. 국가적 과제나 대한민국의 미래 정책방향에 참고 할 만한 주재국의 동향 에 대한 심층 분석 보 고는 정기 정세 보고에 포함하고, 국회에도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트럼프 행정부 관세 인상 관련 스페인 동향, △스페인의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동향, △시리아·레바논 등 중동 정세에 관한 스페인 입장 등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주재국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 중임. ○ 아울러, 스페인의 우주항공정책(예시) 인구, 주택문제, 의료정책 등 우리 정부에 참고가 될 만한 여러 경제·사회 정책 동향을 발굴, 분석하여 본부 및 유관 부처에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2. 마드리드 한인회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우리 대사관에서는 마드리드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문화교류 한마당, 3.1절·광복절 기념식, 한인 송년의 밤 등 다양한 행사를 매년 지원하고 있음. ○ 상기 사업 외에도, 향후 차세대동포 및 다문화 가정 동포 자녀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마드리드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인회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 국정감사 시 언급된 마드리드 한인회 홈페이지 운영 중단은 홈페이지의 저조한 이용률로 인해 한인회에서 자발적으로 운영 중단 및 한인총연합회 홈페이지와의 통합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것은 아님.
주포르투갈 대사관	1. 포르투갈 혼인제도 및 연금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국정감사 수감 이후, 주재국 혼인제도 및 연금제도 관련 자료 별도 기제출
	2. 건의 또는 애로사항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국정감사 수감 이후, 아래 요지로 기제출 - 그간 K-Pop 월드 페스티벌 관련 외교부 별도 예산이 있었으나 '23년 전액 삭감되어, 여타 문화행사의 부대행사로 지역 예선전을 개최해오고 있음
	3. 양국 간 의회외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	○ 의장단 등 고위급 교류 및 의원친선 협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공 - 의장단 상호 방문* 등 고위급 교류 지원 노력 지속 * 최근 5년간 의장단 교류 동향 - (방포) '21.5 김상희 부의장, '22.9 김진표 의장, '24.11 이학영 부의장 - (방한) '19.2 Ferro Rodrigues 국회의장 - 주재국의 의원친선협회 결성 시 양국 의원친선협회 간 교류 지원 * 최근 주재국 정부 신임안에 대한 의회 부결 (3.11) 이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의회 해산 (3.19) 및 조기 총선 실시(5.18) 예정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바르셀로나 총영사관	1. 한국국제교류재단 ‘코리아코너’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우리 총영사관은 2025년에 바르셀로나 시립도서관에 ‘코리아코너’를 신규 설치하기를 희망하였으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2025년도 사업예산 축소로 코리아코너 신설이 불가하게 되었으며, 국감 실시 이후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코리아코너’ 신규 지정 계획을 재문의함. ○ 이에 대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24년 정부 부담금 정비 일환으로 재단의 주수입원인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액이 20% 삭감됨에 따라, 2025년 사업예산이 전년비 21.6% 축소되었고, 이 과정에서 코리아코너 신규 지원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나 향후 사업예산이 개선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KF 총사업비 2024년 540억원 → 2025년 424억원 / 코리아코너 예산 2024년 3.4억원 → 2025년 1.3억원 ○ 우리 총영사관은 코리아코너 신규 지원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바르셀로나 시립도서관 내 코리아코너 신설을 재추진할 예정임.
주알제리 대사관	1. 공관의 정기 보고 시, 전략적인 경제협력을 심층적으로 분석 및 보고할 것	○ 매주 알제리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동향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보고 중이며, 앞으로도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협력 분석 및 보고를 강화해 나가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알제리 주요 입찰정보를 정리, 주기적으로 보고중이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알제리 시장 진출 적극 지원 추진 중임. - 아울러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전략적 수준의 경제협력 증진이 필요한바,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계획임.
	2. 구매력에 근거한 알제리와의 경제협력을 진행할 것	○ 월드뱅크 발표 2023년도 자료 기준 알제리의 1인당 구매력지수 GDP(PPP)는 \$16,824로 1인당 명목 GDP \$5,364보다 3배 가량 높은 수준임. ○ 이는 알제리 경제와 잠재적 고객의 구매력 및 내수시장 발전 잠재성을 보여주는 수치로, 동 사항을 우리 기업들의 알제리 시장 진출을 비롯한 경제협력 강화 과정에 참고하여 추진할 계획임.
	3. 알제리와의 광물 협력 관련 대화를 추진할 것	○ 2025.1월 알제리 에너지·광물·신재생 에너지부 장관 면담시 광물분야 양국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2025.2월 개최된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에 알제리 정부 대표단이 참가하여 핵심광물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함. ○ 이외에도 양국간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협의를 각급에서 진행중이며, 실질 협력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ODA에 대한 마구잡이 식 사업 확대 대신 내실 있는 사업 진행을 도모할 것	○ ▲ 디지털 전환 ▲ 사이버 안보 ▲ 과학수사 역량 강화 ▲ 전자무역 등 알제리가 높은 관심을 가지며 동시에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ODA 사업을 추진중이며, 향후로도 사업 간 시너지 효과 제고를 비롯해 내실 있는 사업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주튀니지 대사관	1. 선거 제도 관련 개황책자 또는 자료를 제출할 것	○ 국정감사 수감 이후 튀니지 의회 선거제도 관련 자료를 기제출 했음.
	2. 국회에도 경제협력 분야 중 유망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보고 및 주재국 정세경제 상황에 대한 심층보고를 주기적으로 할 것	○ 튀니지의 경제 동향을 반기별로 본부 보고 하고 있으며, 유망 산업 분야 관련 수시 보고하고 있음. - 2025.2월 기준 경제 동향 및 전망, 무역, 투자 통계 기보고 - 2024.10월 자동차 부품 산업 동향 기보고 ○ 튀니지는 이공계열 및 IT 중심의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과 인접성 등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여 주변국에 비해 첨단 기술 분야에 우위를 갖고 있는 바, 관련 동향 수시 보고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공관 차원에서 회의 어젠다를 개발할 것	○ 튀니지가 자동차 부품 산업, 의료 분야 및 스타트업 분야에서 다소 경쟁력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동 관련 협력강화를 향후 회의 어젠다로 상정하는 방안을 본부와 협의하겠음. - 2025.2월 튀니지 보건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보건 분야 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 - 관련 분야에서 내실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
	4. 공관에서 사업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본국에 주재국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양국 관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5. KOICA 사업 관련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본부에 제기하고 공관 차원에서 밀도 있는 준비를 할 것	
주이집트 대사관	1. 주사우디대사관과의 화상회의 시스템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므로 공관 통신 환경을 개선할 것	○ 우리 대사관은 국감 당시 상대측 공관 음성을 우리 대사관에서 인식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 환경을 점검하였고, 외교정보통신 전용회선 2중화 사업(2025.4월) 등 통신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 아울러, 금년 4분기에 내용연수 경과 예정인(2025.9월) 스피커 장비를 교체하는 등 공관간 화상회의시 원활한 소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나갈 예정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이집트에 대한 우리 방산 수출을 위해 공관 차원의 노력을 진행할 것	○ 우리 대사관은 주재국에 진출한 방산 관련 기업들을 접촉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진행중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중임. - 동 일환으로 2024.11월 대사 및 국방무관이 현지 K-9 생산공장 가동준비 격려를 위해 2개 이집트 공장 방문 등 지원 ○ 아울러, 우리 대사관은 금년 12월 주재국에서 개최되는 아프리카 최대 방산전시회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임.
	3. 현지 진출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 우리 대사관은 분기별 기업지원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진출기업 동향 및 애로사항을 수시 파악중임. ○ 우리 대사관은 주재국 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애로사항 발생시 신속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바, 앞으로 이를 지속 유지·강화해나가겠음.
주사우디 대사관	1. 벤처공동펀드의 우리 기업 지원조건, 실제 지원실적 등을 제출할 것	○ (우리기업 지원 조건) 한-사우디 공동펀드는 '23.11월 결성되었으며, 총 규모 \$158.8M 중 한국 정부(모태펀드) 출자 약정액 \$10M만큼 한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투자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우리기업 지원 실적) 현재까지 한-사우디 공동 펀드는 3개의 한국 기업 (애드실드, 베이콘, 유지니어스)에 총 \$2.87M를 투자하였으며, 이는 한국기업 투자 의무의 약 28.7%임
	2. 우리 국민 사건사고 상 세 현황을 제출할 것	○ 불법체류자(1건) 출국 관련 문의 대응 ○ 경찰청 소재 확인, 연락두절 신고 등 실종신고 5건 소재 확인 ○ 사망사건(3건) 관련 시신 운구 등 영사조력 제공 ○ 절도피해(2건) 관련 유선 통역 및 현지 경찰서 대응 등 지원 ○ 수술, 구금 등 기타 사건사고 관련 관계기관 협조 요청, 통역 등 지원(4건)
	3. 대사관 정비소요 예산 필요사항을 제출할 것	○ 청사 비상발전기 교체 43,000\$ (수선 주기 10년) ○ 관저 노후 배선 교체 및 인테리어 공사 50,000\$ (수선 주기 15년)
	4. 네옴시티 사업에서의 우리 기업의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공관 차원에서 대처할 것	○ 최근 네옴시티 사업 조정 등 동향을 감안, 우리기업이 참여중인 네옴 더라인 터널구간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24.12) * 주기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장 애로 적시 해소 및 피해 예방 조치 계획 ○ 네옴시티 사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중으로, 우리 대사관, 공공기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진출기업간 상시 정보 공유 체계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우리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시 대응할 계획임.
	5. 원유 결제화폐 문제 관련하여 공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	○ 사우디가 국제결제 은행(BIS)의 ‘mBridge’ 프로젝트 참여한다는 보도 등이 있었으나, 상기 플랫폼이 실제 원유거래에 적용되지 않았으며, 사우디측이 위안화를 원유 결제에 활용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음. - 앞으로도 사우디측이 비전2030 등을 통해 석유 의존도 축소, 경제 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탈달러 대응과 연계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사관 차원에서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임.
주인도대사관	1. 대사관 인력 보강 필요성 및 구체인력 보강 소요를 보고할 것	○ 2024.10.21. 서면으로 기보고하였음.
	2. 對인도 공공외교 전략 및 기대효과 등을 보고할 것	○ 2024.10.18. 서면으로 기보고하였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재외공관원 처우 관련 현장 고충을 정리 및 보고할 것	○ 2024.10.21. 서면으로 기보고하였음. ○ 우리 대사관에서는 인도의 심각한 대기오염 관련 근무여건 개선 건의(전문 보고 2건)를 통해 특수지 등급 및 임차료 상향 등 건의
	4. 인도의 IPOI 추진 현황과 참여국 등을 보고할 것	○ 2024.10.14. 서면으로 기보고하였음.
	5. 인도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국내 기업들은 전문인력(E-7) 비자 제도를 활용하여 인도 출신의 숙련 인력을 고용 중 -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200명 이상의 인도 숙련공이 국내 조선소에 파견되어 용접공 등으로 근무 ○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도 2024년 인도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200여 명을 국내 벤처기업에 채용하는 프로그램을 도입 ○ 향후 인도 전문인력 채용 확대를 위해 △국내 기업과 인도 인재 간의 매칭 지원 강화, △전문인력 비자 발급 절차 개선, △인도공과대학(IIT) 등 주요 교육기관과 협력을 통한 우수 인재 발굴 및 유치 같은 조치를 추진할 계획
	6. LG화학공장 유독물질 누출이 양국 관계 악영 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것	○ 2020년 5월, 인도 남동부 비샤카파트남에서 사고 발생 직후, 우리 대사관은 LG 화학 인도지사 및 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 지원 및 사고 수습을 적극 지원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이와 함께, 인도 정부 및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사고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 LG화학은 피해 지역 약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지원금 지급, 건강 추적 검진센터운영 등 약 200억원 이상 규모의 지원을 추진 중 ○ 앞으로도 우리 대사관은 LG화학과 함께 △인도 정부 및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여 신뢰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 방문 및 CSR 활동 지원을 통해 한국 기업과 현지 사회 간의 협력 강화를 추진 예정 - 아울러, LG화학 등 한국 기업들의 인도 내 사업장에서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를 독려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
주우즈베키스탄 대사관	1. OECD DAC 관련 효율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다른 선진국들의 현황을 보고할 것	○ 대사관은 본부 지침에 따라 현장 중심의 ODA 사업 발굴과 관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관장 중심의 ODA 협의체 운영하고, 주재국 수원총괄기관과 긴밀한 소통체계를 마련하여 ODA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지속중 ○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주재국의 최대 ODA 공여국(OECD 2023년 확정액 기준) ※ 對우즈베크 주요 공여국(OECD) 현황 (단위: 백만불) - ('23년 단년, 유무상) ①한국(41.04) ②독일(31.49), ③일본(28.24), ④프랑스(23.21) - ('23년 단년, 무상) ①한국(35.69) ②독일(31.49) ③폴란드(22.41) ④EU(17.22) ⑤스위스(10.45)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재외공관 인력 현황에 대해 어떤 분야 인력이 부족하며 어떤 역량을 위해 증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자료를 제출할 것	○ (공공외교 인력 증원 수요) 현재 공공외교 담당 인력은 0.5인 수준으로, 공공외교 전담 인력 증원 필요 - ▲최근 양국 교류 증가(2024년 5.9만명 방한 및 3.9만명 방우) ▲주재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높은 호감도 ▲주재국내 한류·태권도 인기 확산(태권도 수련인구 2만명(19년)→4만명(24년)) ▲주재국내 한국어 학습자 지속 증가(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 4,122명(21년)→13,416명(22년)→25,319명(23년)→약 40,000명(24년)) 등 공공외교 수요 폭증 - 주재국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며(3,600만명), CIS권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18만명)하는 거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원 부재 및 담당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공공외교 정책 추진에 어려움 존재 ○ (영사 인력 증원 수요) 현재 재외동포 담당 인력은 0.5인 수준으로, 재외동포 담당 영사 증원 필요 - ▲주재국 방문 우리 국민 수 지속 증가(1.9만명(22년)→3.9만명(24년)) ▲항공편 확대(2025년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등 신규 취항 예정) ▲사건사고 지속 발생(2024년 46건 / 강력사건사고 비중 31%) ▲사증 신청자 증가(2024년 총 28,853건 / 유학 사증 신청자 4,222명(23년)→5,988명(24년)으로 41.8% 폭증) 등의 요인으로 영사업무 수요 지속 증가 - CIS권에서 주재국내 고려인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중이고(18만명) 그 중 상당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고려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가 주재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사회 각계 각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편, 재외동포 관련 사업도 증가 추세임을 고려시 재외동포 담당 영사 지정을 통해 업무 전담 필요 ○ 고려인 강제 이주 역사 알리기 - 1937년 우즈베키스탄에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고난과 역경을 딛고 우즈베크 주류사회에 정착한 역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우즈베크 고려인이 우리 한민족이라는 정체성 함양 - 황만금 농장내 황만금 박물관, 김병화 농장내 김병화 박물관 방문 및 한국문화예술의 집 방문 시 고려인들의 정착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 시청을 통한 정착 역사 알리기 - 고려인 강제 이주 90주년 개관을 목표로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 추진 ○ 고려인 1세대에 대한 체험 봉사활동 전개 - 아리랑 요양원에 입소한 고려인 1세대 및 고령 어르신들의 삶을 통해 우즈베크 고려인들의 정착 역사를 돌아보고 입소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도모 및 한국 청장년들에게 살아있는 체험 환경 제공 * 아리랑 요양원은 고려인 1세대를 위해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2010년 개원하여 현재 한국 국제의료보건재단(KOFIH)이 운영중인 노인 요양보호시설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고려인 공동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한민족으로서의 동질감 회복 및 고려인에 대한 인식 제고 - 고려문화협회가 주최하는 각종 우리 전통 명절(설, 단오, 한식, 추석 등)에 우즈베크 교민사회가 참여하여 고려인 동포가 보전하고 있는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각종 고려인 예술단체에 대한 전통문화 전수 등을 통해 한민족으로서의 동질감 제고에 노력 - 우즈베크 한인사회와 함께 우즈베크내 독립 유공자 후손 발굴 및 훼손된 독립 유공자(후손) 묘지 등 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언론 등에 홍보하여 우즈베크내 고려인 동포 및 독립유공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역사 인식 제고에 노력 - 우즈베크 한인사회와 정보 공유를 통해 소외받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민간 차원의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주중국 대사관	1. 중국이 한반도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촉구할 것	○ 대사관은 중측과 소통 계기마다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한 건설적 역할 수행을 당부 중임. - 중측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측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 각측의 공동이익인바, 이를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입장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앞으로도 역내 안정을 위해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적절히 발휘해 줄 것을 지속 요청할 것임.
	2. 중국 어선 불법 조업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중국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며 중측이 실효적으로 지도 및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	○ 정부는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정부의 불법조업 근절 노력을 지속 촉구하면서, 중국측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지속 요구해오고 있음. - 대사관은 24.12월 제24차 한중 어업공동위 등 계기를 포함하여 중국 어선의 서해 NLL 인근 및 동해 지역 불법 조업 상황을 중국 정부에 알리고 문제 제기중임. - 아울러, 시기별, 해역별로 농업농촌부, 해경국 등 관련 부서에 불법어업 문제 제기 및 강력한 단속과 재발방지 조치 요구 등 한-중 조업질서 강화를 위해 노력 중임.
	3. 외교부의 재외공관근무수당 조정 및 인력보충 자료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것	○ 대사관은 그간 본부에 재외근무수당 인상 및 소요인력 증원 필요성 등을 적극 건의해 왔음. ○ 앞으로도, 본부의 수요조사 계기에 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을 충실히 계속해 나갈 예정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ESS 산업 등 재생에너지 관련 중측과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실질 이익을 돌파구로 삼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	○ 대사관은 에너지, 산업, 통상 분야를 포함한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24.12월 「한중 경제공동위(차관급)」 및 「한중 FTA 공동위(장관급)」 개최를 지원하는 등 양국의 실질·공동이익에 기반한 경제통상 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중임. * 한중 경제공동위('24.12.12, 서울) * 한중 FTA 공동위('24.12.9, 서울) ○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중 양국은 상호 중요한 경제·무역·경제협력 파트너로서, '24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2,728억 불을 기록하였는바(전년 대비 2% 증가), 이러한 경제협력 관계의 지속 발전을 위해 양국 정부, 기업간 협력 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가겠음.
	5. 북한의 사치품 수입 방지를 위해 중국 정부와 협조할 것	○ 대사관은 중측에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동향을 더욱 주시할 것임.
	6. 한한령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내용 파악을 위해 중국 사정에 밝은 언론인과 적극 소통할 것	○ 공연과 드라마 등의 주무기관인 중국 문화여유부, 국가광전총국 등과 적극 소통하고 있음. ○ 문화원장과 문화홍보관이 관련 사항에 대해 중국 언론을 상대로 수시로 협조 요청 중에 있음.
	7. 한중 경제관계 강화를 위해 대사관의 역할을 강화할 것	○ 대사관은 민관이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대중 경제외교의 최전방에서 적극 활동해 왔음. - 대중 수출/진출 진작을 위하여 기업 상담회 및 교류회를 다수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플랫폼 입점 및 안정적 판매 활동도 지원함. -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하여 중국 정부당국과 공급망 핫라인을 구축하여 소통·협력중이며 핵심원료 및 광물 수출통제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중임. -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기업, 유관기관들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공관들과도 유기적으로 협력중임. - 각 부처 고위급 협의체 지원, 재중 기업 지원 등을 통해 한중간 실질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함. ○ 향후에도 중국 정부 및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한중 경제관계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해 나갈 예정임.
	8. 미국 신정부 출범에 있어 선제적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한-중 정상회담을 고려할 것	○ 금년 경 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현안 관련 전략적 소통을 진행하고 있음. ○ 앞으로도 정상급을 포함, 다양한 고위급 교류 계기에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 추진할 것임.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중 관계를 신중히 관리하기 위해 대사가 발언을 신중히 할 것	○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기반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성숙한 발전을 위해 노력 중임.
	10. 한중 양국이 레드라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원칙을 정하고,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할 것	○ 한중 간 여러 현안에 대해 우리의 국익과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를 견지하면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할 것이며, 이러한 입장에서 중측과 소통할 것임.
	11. 탈북민들의 강제 복송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것	○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복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측에 다양한 계기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음.
	12. 탈북민에 대한 정책상 한중 간 인식이 있는 만큼, 관련하여 한중 간 교류협력을 증진할 것	○ 정부는 탈북민 관련 다양한 중국 관련 부서와 교류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
	13. 난징 리지상 위안소와 관련하여 대사로서 중국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	○ 중측과의 소통을 통해 한중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가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상하이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독립사적지 표지석 오류 등 중측과 협의를 위해 보훈관 공석 문제를 해결할 것	○ 중국 내 다수의 중요 독립사적지가 소재하는 만큼, 독립사적지 보존을 비롯한 역사·보훈 업무 수요 부응을 위한 보훈관 증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15. 핵심품목에 있어 대중국 의존이 여전히 크고 4차 산업 분야 핵심기술의 중국 우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경제관계 강화를 위해 대사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	○ 대사관은 공급망 핵심품목의 안정화를 위해 「한중 공급망 핫라인」(주중대사관/산업부-중국상무부)을 가동·지원하고 있으며, 한중경제공동위, 한중수출통제대화체 등을 통해 교역 활성화, 기업 지원, 공급망 협력 등을 지속 추진중임. * 한중 수출통제 기업설명회(‘24.11.15, 우시) * 한중 공급망 핫라인회의(‘24.11.28, 옌청) ○ 또한, 매월 코트라·무역협회·광해광업공단·중국한국상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대중 수출동향 점검 및 기업지원 협의회’를 개최하여 한중 교역현황 및 우리기업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는 한편, 중국정부(상무부, 공신부, 발개위 등)와도 지속 소통·협력중인 바, 한중 경제협력 업무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음.
	16. 미국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금지법, EU 공급망 실사법 등 여타국의 대중 무역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업 지원을 노력할 것	○ 대사관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공급망실사지침 도입 등이 중국내 사업중인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와 함께 대응전략 웨비나를 개최하고(‘24.12), 기업 대상 제도 설명 및 대응 전략 컨설팅 등을 진행하였음. * EU 규제조치 대응전략 설명회 : 150여개사 참석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향후에도 유관기관·협회와 함께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모니터링하면서 통상이슈별 웨비나·방문설명회 개최,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음.
	17. 중국에서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이므로 우리 기업들이 잘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에 유의할 것	○ 진출 기업 대상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주일본대사관	1. 야당의 입장을 레버리지로 삼아 한일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균형적인 시각으로 한국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노력하겠음. ○ 금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대사로서 ‘일한’과 같은 표현을 자제하고 한국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균형 있는 역할을 할 것	○ 주일대사로서 공식·비공식 일정에서 ‘일한’이라는 표현은 자제하고 있음.
	3. 우키시마호 관련 추가 명부 확보, 진상규명을 위한 한일 공동 조사, 유테지 한국인 유해 275위 봉환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	○ 주무부처(행안부)와 긴밀한 소통 및 협력하에 유골봉환 관련 일본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일측에 요청하는 등 지속 노력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대북정책 관련 한일 정부 간 긴밀히 조율한 후, 미국 신정부와의 협의해 한미일이 일치된 정책을 추진할 것	○ 우리 정부는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 성명(2.15)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 대북 제재·압박 노력의 중요성 등을 재확인하고 대북정책 수립 이행 관련 공조를 긴밀히 하기로 한 바 있음. ○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갈 것임.
	5. 이시바 총리의 방위안보 관련 지론들이 정책화 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	○ 우리 대사관은 일본 방위안보 정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일본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임.
	6.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한국인 노동자 관련 전시 내용 중 조선인에 대한 비하적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해결할 것	○ 해당 사료는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들이 겪은 강제적이고 가혹한 환경과 차별적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로 전시된 것임.
	7. 강제징용 해결에 있어 일본 기업들이 한일 미래 기금 외에, 재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일본 기업을 포함한 민간의 자발적 기여가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가 후방기지가 위치한 일본의 지원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 한일 간 ACSA 체결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	○ 한일 양국은 2011년 전후로 PKO, 재난구호 활동 등에서의 협력 심화 차원에서 ACSA 관련 실무 논의를 가진 바 있으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중단되었으며, 이후 ACSA 체결 추진을 검토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9. 관동 대지진 학살에 대해 진상규명 및 공동 조사를 요구하고 1.5트랙 대화 추진을 검토할 것	○ 일측에 관동대지진 학살에 관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제기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10. 아미 베라 美 하원 의원이 제안한 한미일 JDZ 공동개발 가능성을 검토할 것	○ JDZ 협정 관련 상황에 따라 미측의 역할도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바, 그러한 점도 고려하여 구체 대응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 고자 하나, 한미일 3국 공동개발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11. 라인야후 1차 행정지도 관련 외교부가 과기부에 공문을 송부한 날짜를 자료로 제출할 것	○ 우리 정부는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3.5) 실시 직후, 네이버 측과 소통하여 행정지도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 주일본대사관은 우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의사결정권을 존중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네이버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행정지도의 내용을 분석하고 대책을 검토하여 본부에 최초 전문 보고하였음(4.9.). - 대사관은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 총무성 등 일본 정부와 접촉하고, 관련 사항을 본국에 유선 등으로 수시로 보고하였음.
	12. 일본의 2025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한 대사관 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주일본대사관은 현대차재팬과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경산성 자동차과 면담 시에도 상호 간 공정한 보조금 책정을 위해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논의하였음. ○ 현대차 이외에도 현지 사업 중인 우리기업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와 지속 소통하겠음.
	13. 일본의 ‘임금 인상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정책’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고 본국에 보고할 것	○ 일본의 경제 동향(GDP, 경기동향, 고용, 임금, 물가, 소비, 생산·무역 등) 및 성장형 경제정책과 관련된 주요 동향(반도체 산업 지원 논의, 종합경제대책 수립, 최저임금 인상, 예산 편성)등을 지속 보고하고 있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4.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제적 수준의 모니터링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보 교류를 지속적으로 할 것	○ 한-IAEA간 후쿠시마 정보 메커니즘 (IKFIM, '23.8월~)을 통해 방류 진행 현황 및 설비 점검 결과 등을 IAEA와 직접 정보 공유 중임. ※ IAEA 현장사무소 방문, 양측 전담관 간 화상 회의, IAEA로부터 서면보고 접수, 이상상황 발생 시 통보 등 ○ IAEA 모니터링 TF 및 확증모니터링 (교차분석)에 우리측 전문가와 분석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참여 중이며,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우리측 전문가를 주기적으로 파견하여 주요 설비 및 시설 상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 중에 있음. ○ 앞으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에 부합되고 계획대로 방류되는지 지속적으로 정보 교류 및 모니터링하겠음.
	1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금액에 대해 일본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것	○ 구상권은 우리가 먼저 피해 보상을 하고 추후 일본에 청구한다는 개념으로, 국제법상 국가간 '구상권' 자체를 다루는 협약이나 규범은 부재함. ○ 다만, 우리 국민의 피해 발생, 오염수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방류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고 위법성이 인정되는 등 요건이 충족된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국제법 등에 따라 최선의 보호·복구 등에 노력할 예정임.
	16. 2010.11.14.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일본 총리가 한일 도서협정에 대한 서명을 통해 조선 왕실 의궤를 반환받았으나, 한일 관계 정상화가 되었음에도 약탈된 문화유산에 대한 반환을 정상회의 의제로 올린 적이 없으므로 이를 문화원에서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것	○ 국가유산청 및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 등 해외 한국문화재 현황을 파악하고,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음.
	17. 주재관들의 업무 난이도, 피평가자의 업무실적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할 방안 등은 기존 자료를 참고하여, 공정하고 차등하게 인사평가를 할 것	○ 주재관 근무실태보고서, 정기활동보고서(연 2회) 제출시 공정한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 평가시에도 업무실적에 기반한 차등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Ⅲ. 산하 기관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국제 협력단	1. 코이카 인턴(해외사무소 및 재외공간 영프로페 셔널(YP)) 채용 면접 과정에서 MBTI를 질문 하는 등 비직무적 요소 를 채용 평가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할 것	○ KOICA 인턴 채용 과정 중, 영어 구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원자의 일상생활, 개인적인 관심사와 업무 경험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음. ○ 향후 면접지원자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질의는 지양하도록 안내하겠음.
	2. 손정미 상임이사 선정과 관련한 심사결과표, 비식별처리한 최종후보 10인의 이력서 등 관련 자료 제출할 것과 제출 불가 시,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 한 사항으로서 국가안 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소명할 것	○ 관련 자료 일체 제출 완료하였음.
	3. 손정미 상임이사 선정 관련 자료 제출 과정 에서 자의적인 편집과 연기, 거부 등이 있었 음에 따라 국회 자료 요구에 대한 충실성을 제고할 것	○ 향후 국회 자료 요구에 대해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한국국제 교류재단	1.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물 구매 의무 비율이 연간 구매액 대비 1% 이상 달성해야함.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비율은 전년대비 3.2배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바, 구매 의무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 교육, 중증장애인생산물 박람회 등 보건복지부 시행 사업에 지속 참여하여 관련 업체 정보를 취득하고, 내부직원 교육을 통해 독려하겠음. ○ 자체 제도 개선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 시설에서 취급하는 물품(복사용지, 토너,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생산물 구매를 의무화할 것임.
	2. 대통령의 부담금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국제교류기여금이 감면된바, 타 기금 전입이나 일반회계 예산 지원 등 방안을 강구할 것	○ 재단 사업을 ▲기금을 활용하는 재단 고유사업과 ▲일반회계 편성이 가능한 외교부 이관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음. ○ ▲타 기금 전입, ▲기여금 한도 상향, ▲타 기관 협업 사업 추진, ▲민간 기부금 확대 등 향후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재정 당국과 지속 협의해나갈 예정임.
	3. 코이카에서는 AI 가상인물 ‘버추얼 서포터즈’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메타버스 이용자 추이	○ 재단은 2024년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25편의 콘텐츠를 제작·배포함. 이 중 AI 기반 숏 류비 형식으로 10편을 제작하였음.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대비 비용 투입이 비효율적임을 고려하여, AI 산업이 부상하는 현재의 흐름에 맞춰 예산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것	○ 또한 “디지털 실감 콘텐츠” 사업의 일환으로 KF XR 갤러리 <메타 시티: 서울-파리>, <시간을 여는 시간> 전시회 AI를 활용하여 글로벌 이슈, 빅데이터 등을 수집 및 분석, 시각화한 작품들을 제작 및 전시함. ○ 향후 AI 활용 콘텐츠를 확대하여 예산의 효과성 제고를 도모하겠음.
한·아프리카 재단	1. 퇴임한 이사장의 업무 추진에 관해 문제가 없는지 정리하여 보고할 것	○ 신임이사장 취임(2024.09.23.) 후 업무추진비 지침 개정 등 제반 사항 점검 완료 / 향후 규정 및 지침 개정 시 외교부(아프리카중동국) 승인을 필수로 하여 관리감독 강화
	2. 외교부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전임 교류협력부 부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2023년도 외교부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은 재단 인사규정 제22조2항에 의거, 기존의 부서장 직위를 해제하고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

[별첨] 주미국대사관 청사 노후화 관련

참고 자료 [청사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필요성]

※ 주미국대사관 2024년 국정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참고 자료

* 애로 및 건의사항(행정직원 처우 개선, 청사 노후화, 핵심신흥기술 및 공공외교 전담인력 확충) 해소 지원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출할 것

구분	내용
현 건물 안전도	○ 2021.9월 미국 현지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현 청사 건물은 <u>1954년 준공 후 건물 연수가 70년에 달해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외장재 자연 마모 및 부식 등 발생</u>
현 건물 노후화	○ 건물이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워싱턴DC 주재 주요국 대사관 청사와 비교시 <u>자국이 건립한 건물이 아닌 청사를 가지고 있어 국격에 맞는 외교를 위해 워싱턴 DC 랜드마크로서 우리나라가 직접 건립한 청사 확보 필수</u> ○ 1954년 준공 건물로 내진설계 반영 여부가 불확실하여 내진성능 확보 필요 ※ 2011.8월 워싱턴 인근 강도 5.8 지진 발생 ○ 노후 전기배선 등으로 누전 등으로 인한 <u>전기안전사고 발생 우려</u> ○ 엘리베이터 노후화로 운행 중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현 건물 공간 부족	○ 우리나라와 우리 재외공관을 대표하는 청사로서 상징성, 기능 및 성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국익을 위한 다양한 외교행사 및 회의를 위한 공간 절대 부족 - 1층 다목적홀(최대 100명 수용 가능) 공간 협소로 인해 적절한 외교행사 개최 불가 - 다양한 규모의 주재국 또는 외교단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규모별 회의실 절대 부족 ※ 주미호주대사관 경우, 청사 2층의 다양한 행사 및 회의를 위한 공간 확보 ○ 지속적으로 직원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공간 및 업무지원 공간 부족 - 현 청사는 소회의실, 문서고, 파우치실 및 중앙감시실 등을 확보 불가 - 직원수 대비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외부 방문객 및 외부 업무차량 주차공간 부재 / 일부 직원들은 주차공간 사용 불가
경제성	○ 청사 노후화로 인한 시설정비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최근 2년 평균 : 13만불) ○ 부지가 국유화되어 있어, 부지확보 비용 절감 ○ 재건축 시 친환경 설계를 적용하여 일반관리비(공공요금 등) 절감 가능

/끝/